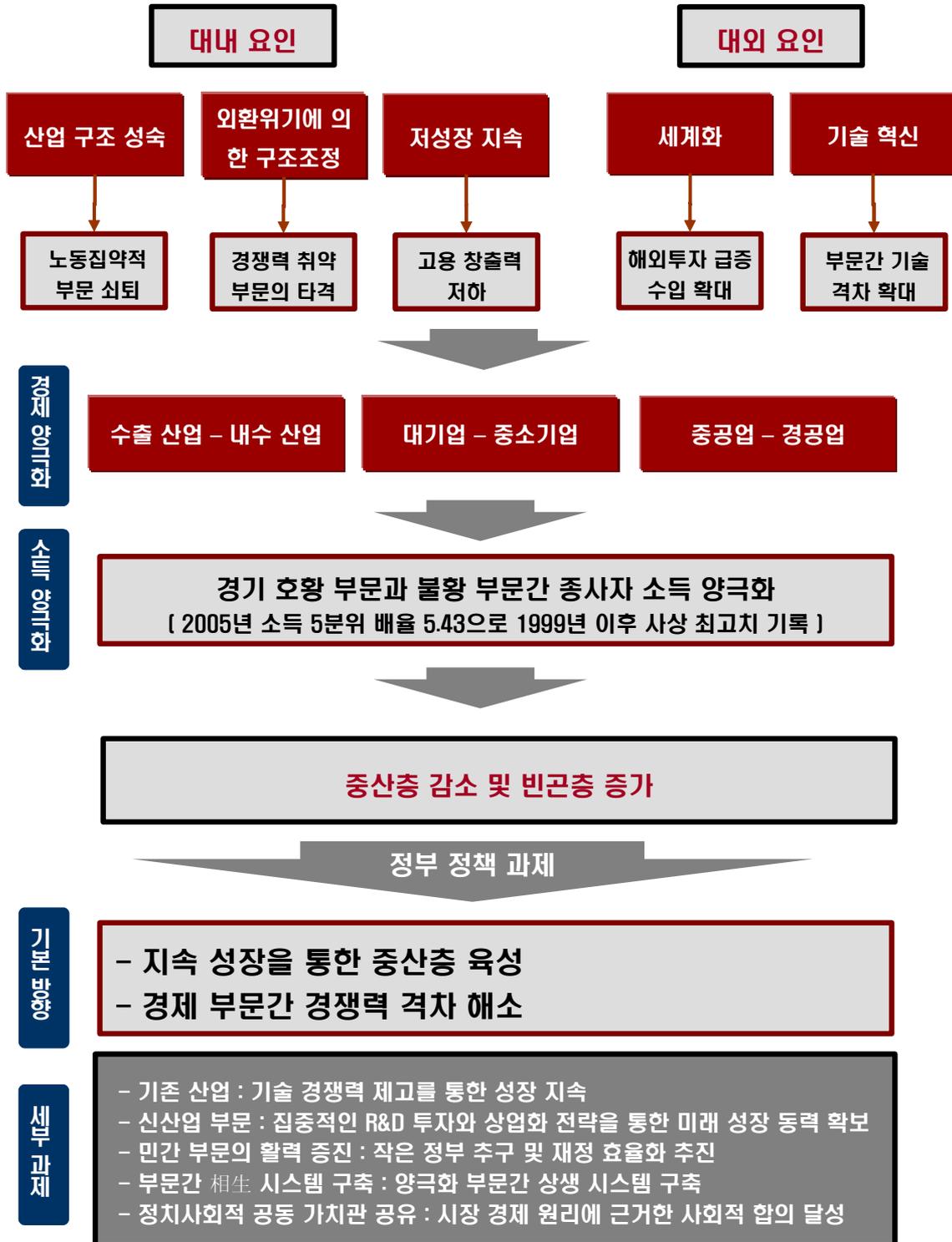


<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 >



□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

1. 경제 양극화는 중산층 붕괴를 초래

- 외환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가 지속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붕괴함
- (경제 양극화) 수출과 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중공업-경공업간 등 경제 내 각 부문들의 경제적인 성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
 - 수출 - 내수 경기 양극화 : 2005년 연간 수출 출하 증가율은 9.6%인 반면, 내수 부문은 2.6%에 그치고 있음
 - 중공업 - 경공업 경제적 성과 양극화 : 2005년 연간 중공업 생산 증가율은 8.7%, 경공업은 -2.9%로 오히려 감소함
 - 대기업 - 중소기업 경제적 성과 양극화 : 2005년 대기업 생산 증가율은 10.7%, 중소기업 -0.6%

< 경기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전년대비, %)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내외수	수출출하	13.3	24.1	22.0	7.5	20.0	9.6
	내수출하	7.2	-22.8	12.5	8.1	2.9	2.6
산업	중공업	11.8	-3.8	20.5	7.8	14.0	8.7
	경공업	-0.8	-15.5	2.8	-4.1	-0.8	-2.9
기업	대기업	12.3	0.0	22.5	6.5	14.6	10.7
	중소기업	2.5	-18.4	4.4	2.7	5.1	-0.6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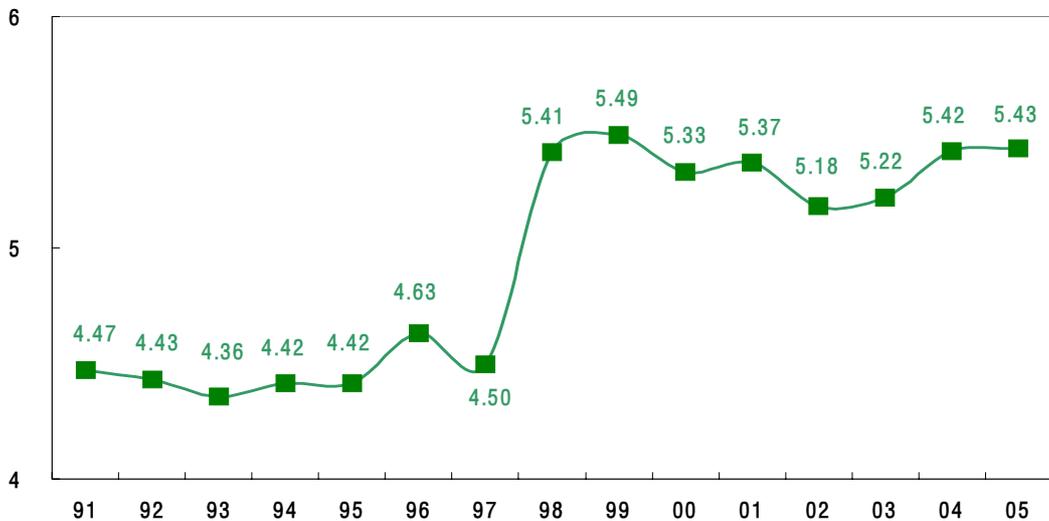
주 : 제조업 기준임.

○ (소득 양극화) 소득 양극화란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간의 소득 분배의 격차 확대를 의미함¹⁾

- 소득 격차의 사실상의 최악 :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5.49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상 최악의 소득 격차를 나타냄
 - 5분위 배율이 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1991~97년 평균 4.46배에서, 1998~2005년에는 평균 5.36배로 크게 증가함
 - 특히 참여 정부 들어서 복지 부문의 정책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5.18에서 2005년에 5.43배로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냄
- 또한 지니계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도 1996년 0.291에서 2005년에 0.310까지 상승함

<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단위 : 배)



자료 : 통계청.

-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평균 소득 / 1분위 평균 소득' 의 배율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두 그룹간의 소득 격차가 커짐을 나타냄
- 통계청의 가계수지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5등분
-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그룹이며, 5분위가 최상위 소득 그룹임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소득이 완전히 고른 상태를, 1은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태를 의미함

1) 일반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중산층 감소가 반드시 소득 격차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확대) 소득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위 소득 수준 의 50~150%의 계층' 인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빈곤층 비중이 증가함

- 중산층 감소 : 외환위기 직후 중산층 비율은 1997년 68.5%에서 2004년에 63.9%로 감소함 (KDI)
 - 중산층의 몰락 : 같은 기간 중산층 감소분인 4.6%p중에서 0.7%p만이 상류층으로 상향 이동한 반면, 대다수인 3.9%p가 빈곤층으로 전락함

< 외환위기 직후 각 소득 계층 비중 추이 >

(%)

	1997	1998	2001	2003	2004
상류층	21.8	23.3	22.7	22.5	22.5
중산층	68.5	64.7	65.3	65.5	63.9
빈곤층	9.7	11.9	12.0	12.0	13.6

자료 : KDI.

주 :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 소득의 50~150% 범위 내에 있는 계층을 의미함.

< 참고 > 다양한 관점에서의 중산층의 정의

- 사전적 의미 : 중산층(中産層)이란 말 그대로 재산(財産) 소유 정도가 중간인 계층을 의미하나, 재산의 범위, 중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정치경제학적 의미 : 유산 계급(有産 階級)과 무산 계급(無産 階級)의 가운데에 위치한 소자산 계급(小資産 階級)을 의미함
- 사회학적 의미 : 소득 수준, 이념 성향, 정치 철학, 교육 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사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함
- 경제학적 의미 : 주택 보유 여부, 거주 지역 등 부차적인 중산층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외 문헌들의 경우 상당수가 표본내 소득수준의 중위수 (median income) 를 중심으로 일정 비율 안에 해당되는 근로자나 가구를 중산층 (middle class)이라고 해석함
 -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은 중위수 (median) 소득의 50~150% 범위 내에 있는 가구나 근로자를 의미함

< 중산층의 다양한 정의 >

구 분	중산층의 정의	
해 외 연 구	OECD	- 중위 소득의 50~150%
	美 센서스국	- 중위 소득의 50~200%
	Thurow (1984)	- 중위 소득의 75~125%
	Lawrence (1984)	- 남자 중위 소득의 2/3~4/3
	Levy (1988)	- 5분위 가구 소득 중 2분위~4분위
국 내 연 구	류상영·강석훈(1999)	- 중위 소득의 50~150%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2005)	- 정치: 진보, 사회: 안정, 연령: 30대, 고학력, 고소득
	홍두승 (2005)	- 소득 수준 :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상 - 계급적 지위 : 중상 계급 - 교육수준 : 2년제 대학 이상 - 주택 : 자가 20평 이상, 전·월세 30평 이상
	유경준 (2005)	- 중위 소득의 50~150%

2. 경제 양극화의 원인

- 최근의 경제 양극화는 경제 구조의 성숙화,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구조 조정, 저성장 지속 등의 대내적 요인과, 세계화에 따르는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기술 혁신 등의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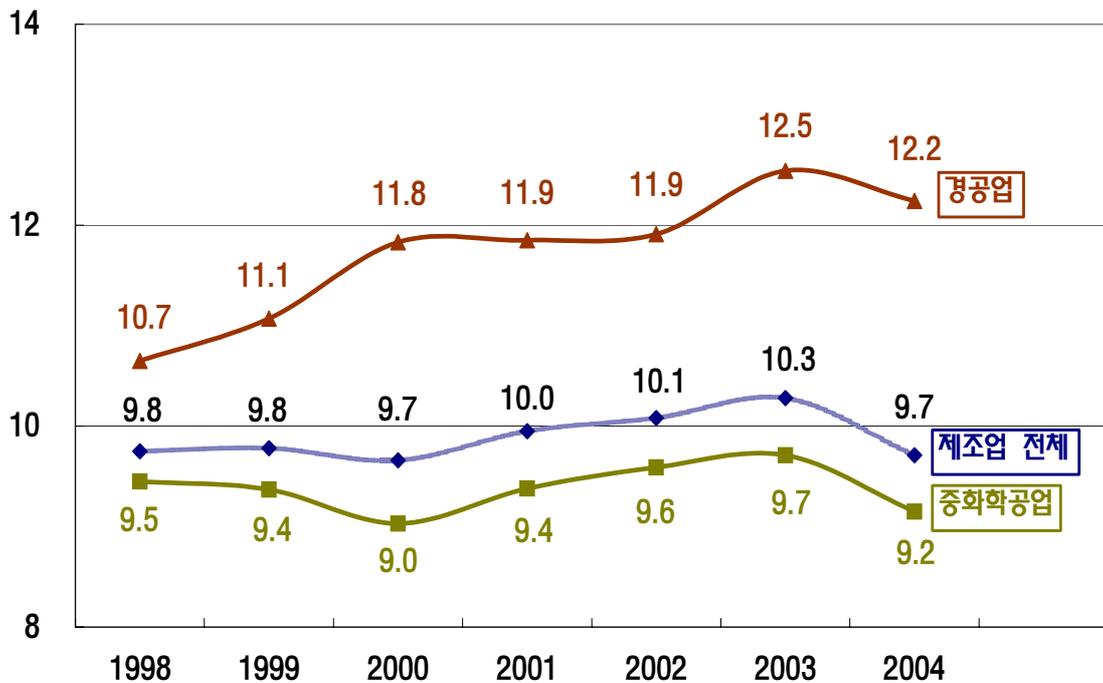
(1) 대내적 원인

- (산업 구조의 성숙) 경제 발전 단계상 산업 구조의 중심이 중공업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높은 인건비 비중 등으로 경공업 부문은 급격하게 경쟁력이 취약함

- 경공업 부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8년에 10.7%에서 2004년 12.2%로 증가한 반면, 중화학 공업의 경우 같은 기간 9.5%에서 9.2%로 하락함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 >

(%)



자료 : 통계청.

-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중화학공업의 경우 1998년 0.0%에서 2004년에 15.6%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같은 기간 경공업은 -1.8%에서 6.2% 증가에 그침

< 자기자본 순이익률 추이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	0.0	-5.8	0.0	17.3	9.6	15.6
중화학공업	0.5	-7.4	-1.2	19.8	10.8	17.5
경공업	-1.8	0.7	4.5	7.4	4.1	6.2

자료 : 한국은행.

-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구조조정) 산업 구조 성숙으로 경쟁력이 위약해져 있는 경공업, 중소기업 부문이,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충격에 직면하게 되어 호황 부문과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 1.7%에서 2005년에 13.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3%에서 0.7%로 크게 개선되지 못함

<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

(%)

	2001	2002	2003	2004	2005 1~3/4
대기업	1.7	19.5	10.7	15.6	13.4
중소기업	-2.3	7.7	2.7	4.9	0.7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05년 1~3/4 분기는 기간중 평균임.

- 외환위기 직후 기간인 1998~2001년의 경우 벤처 기업 붐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에 수익성 격차가 크게 확대됨

< 제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익성 추이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영업이익률	대기업	6.53	7.38	8.21	6.03	7.54	8.16	9.43
	중소기업	6.01	5.66	5.44	4.86	5.01	4.56	4.47
경상이익률	대기업	-2.91	1.01	0.26	-0.58	5.42	5.96	10.23
	중소기업	0.90	3.27	2.92	2.72	3.38	3.17	3.4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연구 DB.

주 : 매출액 대비 이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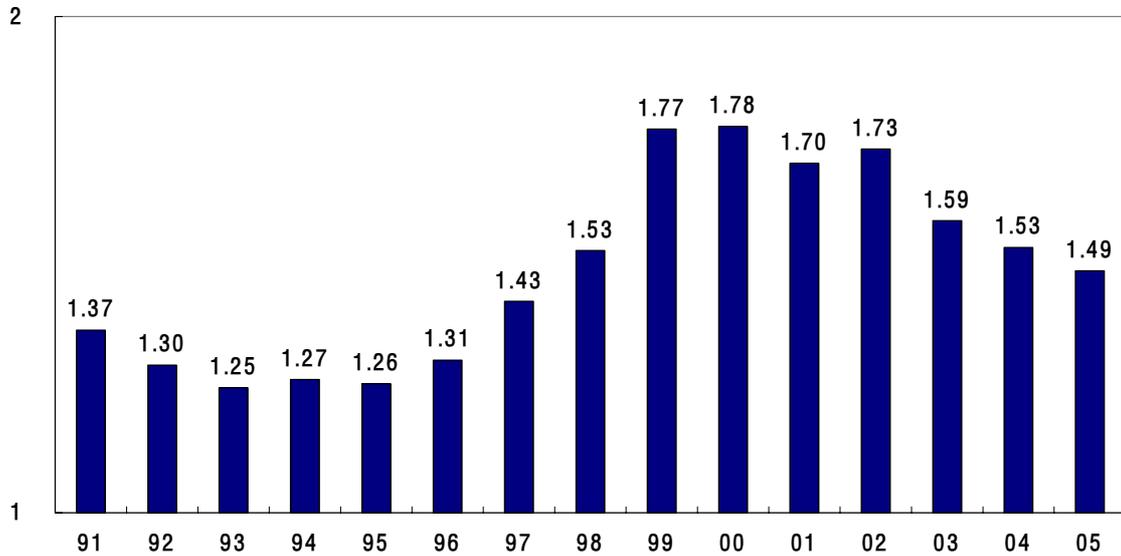
○ (저성장에 지속에 따르는 고용 창출력 저하)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절대적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됨

- 절대적 일자리 부족 :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기업의 도산과 인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1998년 7.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02년에 3.1%까지 낮아졌으나, 2003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5년에 3.5%에 달하고 있음
- 고용 불안정성 심화 : 안정적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급증함
 -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고용이 불안정 계층인 자영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비중은 1.31배에 불과하였으나, 1998~2005년의 기간에는 1.64배로 증가

- 자영자(Own-account worker)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임시근로자(Temporary employee)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근로자(Daily workers)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 상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고용 불안정성 지표 추이 >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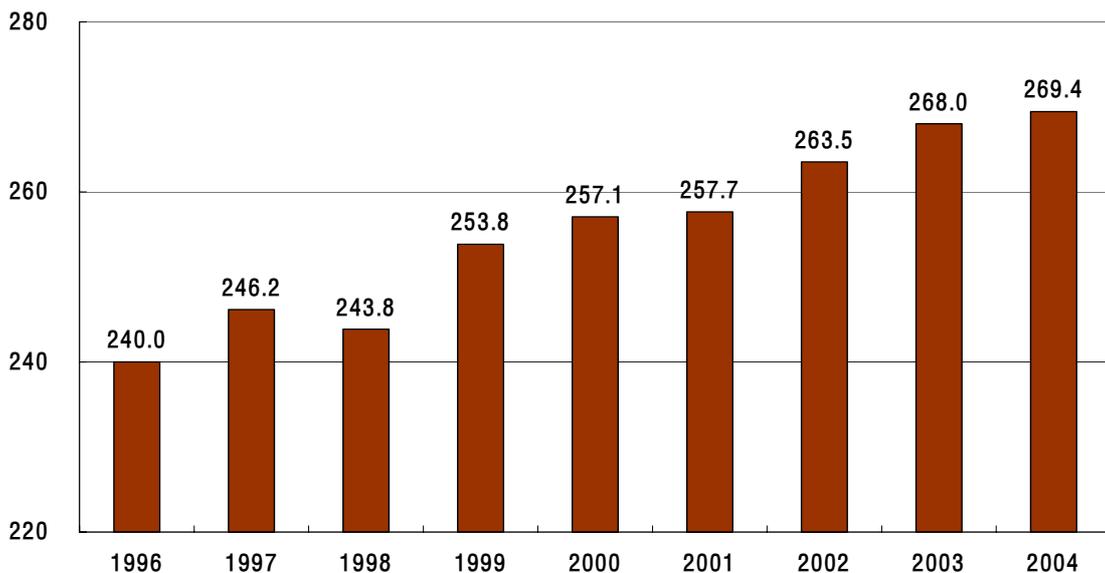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위수치는 (자영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의 배율을 의미함.

- 영세 자영업자수 증가 : 외환위기 이후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퇴직자가 급증하여, 종사자 규모 1~4명의 영세 자영업자의 수는 1996년 240만 개서 2004년에는 약 269만 개로 증가함

< 자영 업체 수 추이 >

(단위 : 만 개)



자료 : 통계청.

주 : 종사자 규모 1~4명 사업체 기준임.

(2) 대외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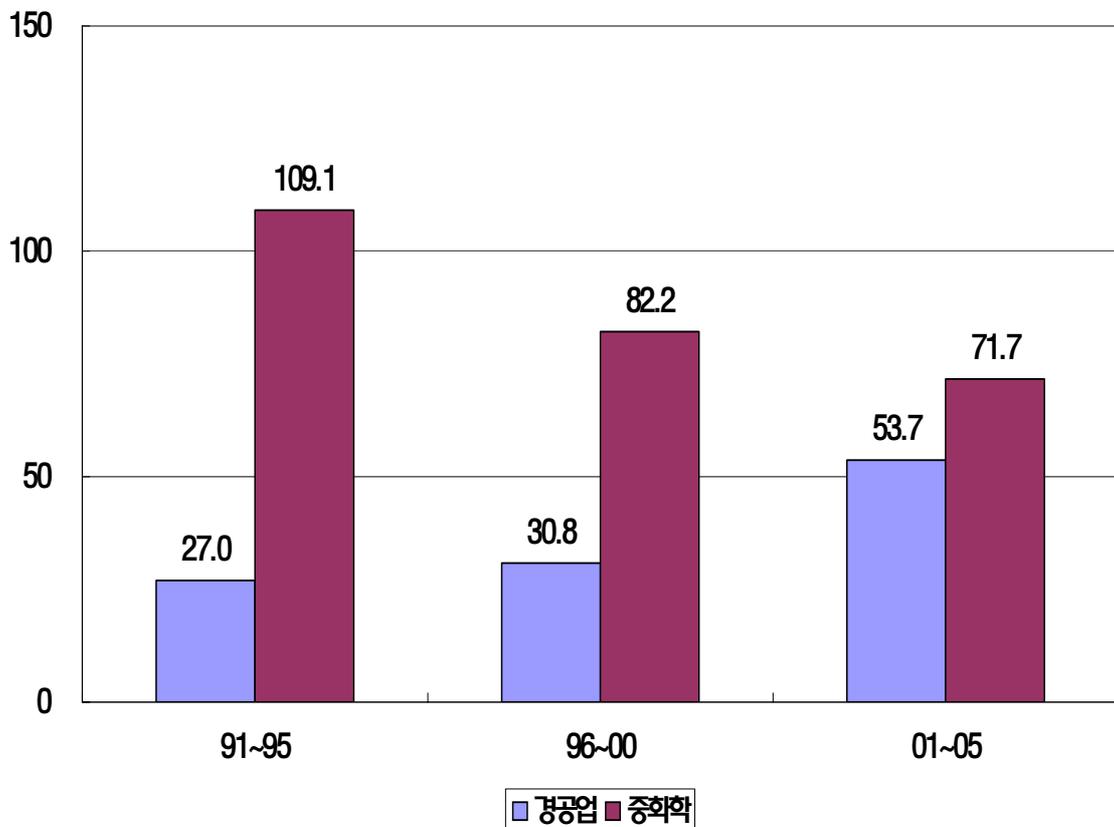
○ (세계화의 부작용) 교역과 투자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수입 확대에 의한 경쟁력 취약 부문의 타격, 생산 설비 해외 이전에 따르는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

- 경공업 제품의 수입 급증 : 교역 자유화 진전으로 경공업 제품의 경우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은 1991~95년에 27.0%에서 2001~05년에 53.7%로 크게 확대됨

· 반면 중화학 제품의 경우 같은 기간 109.1%에서 71.7%까지 수입 대체가 이루어짐

< 산업별 수입/수출 비중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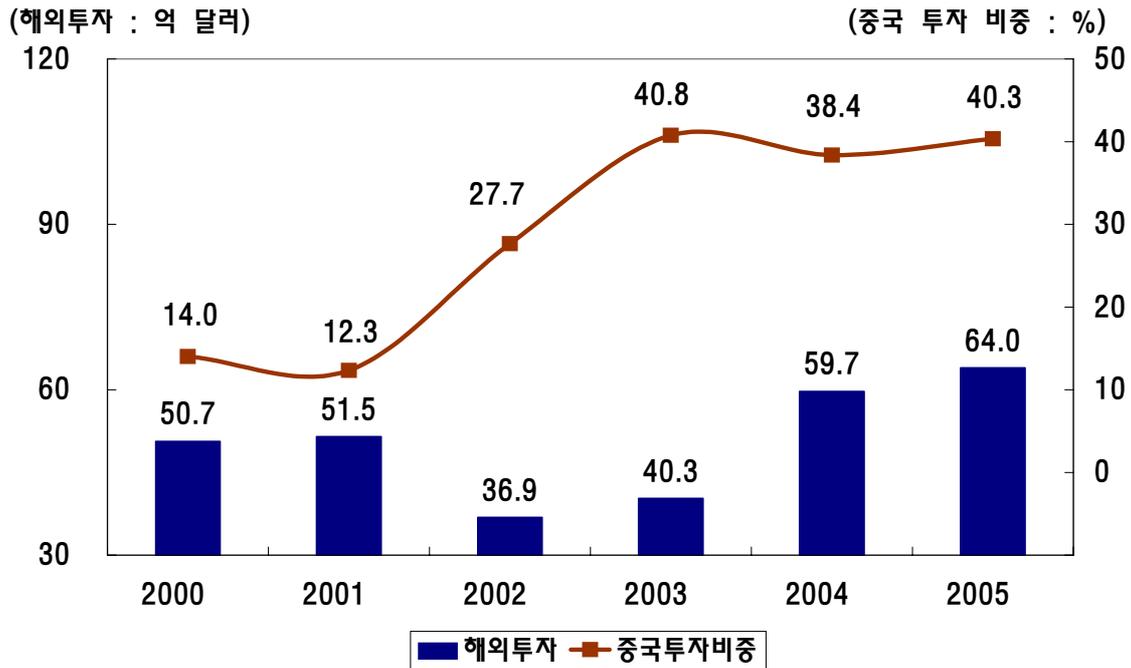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각 부문별 수입액/수출액 비율임.

- 자본의 해외 이탈로 일자리 창출력 약화 : 해외투자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36.7억 달러(실행 기준)에서 2000년 50.7억 달러, 2005년에 64.0억 달러로 급증

< 해외투자 및 對 중국 투자 비중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 (기술 혁신) 중소기업 및 경공업 부문의 경우 기술 인력과 R&D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짐
-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인력 부족률 격차가 1999년 0.7%p에서 2003년에 1.2%p로 확대됨
 - 관리 전문 기술 인력 부족률은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 1999년 0.8%에서 2003년에 1.4%로 크게 확대
 -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 0.1%에서 0.2%로 소폭 증가에 그침

< 관리 전문 기술직 부족률 추이 >

(%)

	1999	2000	2001	2002	2003
중소규모(300인 미만)	0.8	0.9	1.1	1.7	1.4
대규모(300인 이상)	0.1	0.3	0.2	0.5	0.2
차 이	0.7	0.6	0.9	1.2	1.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연구 DB.

주 : 부족률 (%) = 부족인원 / 현재인원 × 100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진 :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총투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특히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사이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 규모의 격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 규모별 총투자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추이 >

(%)

	2004	2005	2006 (계획)
대기업	5.5	4.5	4.3
중소기업	3.3	3.5	3.2

자료 : 한국산업은행.

- 경공업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부진 : 중화학 공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의 1.47%에서 2004년에 2.07%로 0.60%p 확대되었으나, 경공업의 경우 같은 기간 0.34%에서 0.41%로 0.07%p에 그침

< 중공업-경공업 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

	2000	2001	2002	2003	2004
중화학	1.47	1.60	1.68	1.88	2.07
경공업	0.34	0.44	0.37	0.32	0.41

자료 : 통계청.

3. 정부의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의 문제점

-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현상이 구조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 '소득 격차' 완화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문제 인식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 목표 설정의 오류 : '소득 격차 확대 문제'가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변화와 세계화 진전에 따르는 불가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목표 변수인 '소득 격차'의 축소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세 행정의 현실성을 무시 : 특히 고소득 계층의 세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우리나라 조세 행정상의 현실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저소득층의 세원 부담을 급증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함

4.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 (기본 방향) 경제 양극화 해결은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부터 출발하고, 성장 원천을 확충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소득 격차의 근본적 해소는 있는 데에서 없는 데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영합(zero-sum)분배가 아닌, '경제의 안전판'과 '경제 활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세부 과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하며,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 공유와 같은 '사회적 합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력 부문인 중화학 공업 및 IT 제조업의 경우, 가격 위주에 의존하는 국제 경쟁력 유지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성장잠재력 확충 :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거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IT 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R&D 투자와 상업화 전략을 통해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함
 -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 정부 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 및 가계의 경제 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현 정부가 추구하는 '큰 정부' 는 공공 부문의 속성상 그 자체적인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규제를 양산하여 민간 부문의 효율성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높음
 - 부문간 相生 시스템 구축 :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중소 기업간, 도농간 갈등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극화 부문간 상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양극화 문제 인식에 정치·사회적 공동 가치관 공유 : 증세 정책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강구되어야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3669-4008)